

#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백범 김구

박 혁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2018. 3.



#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 -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백범 김구

박혁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 1 3·1 운동의 위상 재정립 .....3
-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 재정립 .....10
- 3 「건국의 아버지들론」 (Founding fathers of Korea)의 정립과  
백범 김구의 위상 재정립 .....17



## 요 약



국가의 정통성이란 현존하는 국가의 역사, 이념, 체제 등이 지금의 사회를 위해 적합한 것이라는 신념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정통성은 국민들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이념적 원칙에 동의할 때, 국가의 체제와 규범에 국민들이 애착을 가질 때, 국가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헌신성에 공감할 때 생기는 것이다.<sup>1)</sup> 국가정통성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국가 정통성이 국민의 자긍심, 통합,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의 체제(국체)와 이념적 지향(정체)을 나타낸다. 이 국체와 정체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가 탄생한 ‘건국’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건국이 지향했던 이념적 지향, 만들고자 했던 국가의 질서, 건국에 헌신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세력들의 이념적이고 배타적인 정통성 주장 때문이다. 그 주장들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뿌리에 상처를 내 자신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학사관을 초래하고 국민통합을 해친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은 배제와 분열이 아니라 자긍심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지금의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의 평화, 행복, 자유를 위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국가창설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영예를 되돌리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역사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인 3·1운동 위상의 재정립이다. 둘째, 3·1정신을 계승해, 세계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확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상의 재정립이다. 셋째, 한계가 분명한 이승만 국부론의 대안적 국부론으로서 「건국의 아버지들론」(Founding fathers of Korea)의 정립, 그리고 임시정부의 유지와 카이로선언에서의 한국독립조향을 넣는데 결정적 외교력을 발휘한 백범 김구의 위상 재정립이다.

1) David Easton 저, 이용필 역, 『정치생활의 체계분석』, 법문사, 1988, 278~303쪽.



## 1 3·1 운동의 위상 재정립

“과거 1년간 일인(日人)은 이 날(3월 1일)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 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소. 일인의 최대 문제는 이 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 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다”

(도산 안창호)

### □ 필요성

-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을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역사적 의의와 위상이 여전히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예: 운동이냐, 항쟁이냐, 혁명이냐는 논쟁)
-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국체), 민주공화국(정체)의 뿌리로서 3·1운동이 지닌 민주적 정통성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함

#### [박헌영]

우리는 **3·1운동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본다. 이것은 민족주의자 중에 특히 우익 반동파에서 (...) 3·1운동을 완전한 일대혁명이라고 보며 이것으로써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과대히 고조하며 (...) 당시 해외에서 망명정치가들의 구락부 집단에 불과하고 또한 조선인민과는 하등의 연락이 없는 소위 ‘망명임시정부’를 가지고 지상명령의 주권체로 보며 ‘3·1명의 권화’로 받들어 금일에 와서도 더욱 그의 ‘법통’을 운운하며 일본 제국주의 통치 잔재숙청과 조선의 민주주의화로의 독립을 보장한 연합국 협정인 모스크바 3상결정을 반대하며 파기하는 반동을 감히 행하기까지 하는 것이다.<sup>2)</sup>

#### [조국현 제헌의원]

“3·1민족운동이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유인(裕仁, 히로히토)정권 밑에서 제도를 고치자는 혁명이 아닙니다. 대한이 일본에게 뺏겼던 그 놈을 광구(匡救)하자는 운동인 만큼 혁명은 아닙니다. ‘항쟁’이라고 할지언정 혁명은 아니요. 혁명은 국내적 일이라는 게 혁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태조가 고려왕조를 전복시킨 것이 혁명이고, 갑오의 운동이 혁명운동이고 우리 조선이 일본하고 항쟁하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

일 여기다가 ‘혁명’을 쓴다면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혁명’글자를 변경해서 ‘항쟁’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국회속기록 제27호, 국회사무처)

#### [8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보고]

먼저 전문에서 민족자주정신과 민주주의이념의 결정체이자 우리나라 근 정부 건립의 정신적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명시함으로써 일제지배로 인한 민족사의 단절을 연결시켜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도록 하고(…)³)

- 3·1운동이 지니는 세계사적 가치와 의미가 정립되지 않아 역사적 자긍심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음

#### □ 내용

- 3·1 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역사적 뿌리
  - 3·1운동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독립국가임을 선언했으며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도 “대한민국”은 “대한국민”들이 “기미 3·1운동으로 건립”했음을 역사적 사실로 명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헌법 제1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 아홉 번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역사적 뿌리라는 사실은 한 번도 부정되지 않았음

2) 이정박헌집편집위원회 편,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1947. 6. 18), 『이정박헌집』 제2권, 역사비평사, 2004, 574쪽.

3) 대한민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6회(8차), 1987. 9. 17, 2쪽.

[역대헌법 전문의 3·1운동에 관한 표현 변화]

헌법	연도	3·1운동 관련 전문내용
제정헌법 (제1호)	1948년 7월 17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b>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b>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
헌법제6호 (전문개정)	1962년 12월 26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b>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b>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
헌법제8호 (전문개정)	1972년 12월 27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b>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b>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
헌법제9호 (전문개정)	1980년 10월 27일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b>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b>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
헌법제10조 (전문개정)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b>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b>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3·1운동은 대한민국건국운동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사의 시작이며 임시정부수립과 임시헌장의 제정, 광복,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이어짐
- 3·1운동을 통해 ‘국민의 나라(民國)’를 표방한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건국된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 전국대표가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 3·1운동에서 절절하게 나타난 2천만 민중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함성을 정부로 수렴해 설립된 수권기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임
- 3·1운동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군주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제로 대전환을 이루었으며 폭넓은 광복정책을 수행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와 경험을 담은 헌법과 제도를 마련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中外協應)하여 **한성에 기의(起義)한 지 30유일(有日)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我)자손 여민(黎民)에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大韓民國臨時憲章, 1919.04.11)

○ 3·1 운동은 모든 국민들이 대단결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한 **촛불혁명사의 시작**

-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해 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민이 주인인 **민국(民國)건설에 나선 전 국민적 항일독립운동**

[김구의 3·1운동 기념사]

“지역의 동서가 없었고, 계급의 상하가 없었고, 종교, 사상 모든 국한된 입장과 태도를 버리고 오로지 나라와 겨레의 독립과 자유를 찾자는 불덩어리와 같은 일념에서 이 운동을 일관했다.”(동아일보 1946.03.02)

[3·1운동 투옥자 통계]

전체 투옥자 8500명, 그 중 농민이 약 60%, 지식인, 학생, 청년이 20%, 상공업자들은 14%(신주백, 한겨레, 2010.03.26)

-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의** 건립을 위해 투쟁한 **민주혁명**이며 영원히 계승해야 할 **민주정신**

[대한독립선언서]

“모든 방편으로 군국전제(軍國專制)를 없애고 민족 평등을 전 지구에 널리 시행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독립의 첫 번째 뜻이다(...)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富)를 베풀어 남녀와 빈부를 고르게 하며 뛰어나거나 모자라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평등이 대하여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 노인과 어린이를 균등케 하여 사해인류(四海人類)를 제도할 것이니 이는 우리 독립의 기치이다.”

[대한민국건국강령]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민족의 전제정치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2호, 1941.12.08)

- 그러한 역사 인식은 **3·1혁명**이라는 표현의 확산으로 나타나 일제말기 임시정부는 **3·1혁명**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함

[김구의 발언]

우리는 ‘3·1’절을 기념할 때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반일독립’과 ‘민주자유’이다. ... 자존과 공존, 민주와 단결, 기개와 도의, 자신과 자존이야말로 ‘3·1’대혁명 정신의 요체이자 전부라 할 수 있다”(新華日報, 1943년 3월 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전문]

“3·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趨向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1944.4.22)

[제헌의회에서 이승만의 발언]

“삼일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때 진력해 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이후의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제헌헌법 제2독회 중에서)

- 3·1운동에 나타난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근대화과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4·19, 5·18, 6·10, 2017촛불혁명 등 비민주적 독재권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됨

[노무현 대통령 3·1절 기념사]

3.1운동은 우리 역사의 기본이다. 오늘 우리가 헌법에서 그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에 잇대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에서 출발된 것이다. 이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발전시켰고 세계 12번째를 자랑하는 경제력을 키웠다. 참으로, 참으로 우리 애국선열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제85주년 3.1절 기념사, 2004.03.01).

- 독립과 자유, 평화, 인권 등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닌 3·1정신은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줌
- 3·1운동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주장

#### [3·1 독립선언서]

금일 吾人의 조선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야금 正當한 生榮을 遂케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야금 邪路로서 出하야 동양 支持者인 中책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하는 불안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한 감정상 문제이리오

- 3·1운동은 비폭력평화주의를 내세운 도수(徒手: 맨손)혁명으로 인도주의에 입각해 한국민의 비폭력적 독립의지를 당당하게 드러냄

#### [박은식]

“우리 민족은 맨주먹으로 분기하여 붉은 피로써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었다.”(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결론)

“이번 조선인의 전국적인 독립운동은 국기를 손에 들고 독립을 외쳤을 뿐 작은 무기조차 들지 않고 매우 질서 있게 조금의 폭동의 상태 없이 진행되었다”<sup>4)</sup>

#### [이승만 3·1절 기념사]

3월 1일은 우리 한국역사뿐 아니라 세계역사에 빛난 날입니다. 27년 전 오늘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처음되는 非暴力革命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1946년 3·1절 기념사)

- 1918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이 전승국의 지배아래 있는 약소민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자 피압박 약소민족에도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최초의 쟁기가 3·1운동임

4) 중국의 中華新報, 왕원주, 「근대 중국인의 한국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5·4운동, 2016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9집, 재인용.

- 자유, 평등, 인권, 평화와 같은 3·1정신은 한국을 넘어 **국제적 보편성을 획득**해 전 세계 약소민족 해방운동, 독립운동에 영감을 불어 넣은 ‘**동방의 밝은 빛**’이 됨
- 3·1운동의 주체(전 국민), 정신(자유, 평등, 진보), 방식(공개적, 평화적 시위)은 중국 5·4운동의 발발과 그 운동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5·4운동의 주역인 북경대 교수, 진독수의 발언]

“이번의 조선독립운동은 위대하고 성실하고 비장하며 명료하고 정확한 생각을 갖추고 있다. 민의(民意)를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참으로 세계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우리들은 이에 대하여 찬미·애상·흥분·희망·참괴 등의 여러 가지 감상을 갖는다. 우리는 조선인의 자유사상이 이로부터 계속 발전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조선민족이 독립자치의 영광을 멀지 않아 성취하고 발전할 것을 굳게 믿는다. (...) 조선민족의 활동의 영광스러움에 비추어 우리 중국민족의 위비(萎靡)하고 부진(不振)함의 치욕이 더욱 드러진다.”<sup>5)</sup>

- 3·1운동은 베트남과 인도의 독립운동, 필리핀 마닐라의 독립시위 운동, 이집트 카이로의 독립시위 운동 등 전 세계적인 독립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침

1924년과 1925년 3·1절 축하식에는 중국인은 물론 필리핀 독립운동가, 인도독립운동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자국의 독립주장과 함께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축사를 했고, 1928년에는 베트남·인도·타이완·몽골 등 동방 피압박민족 대표들이 대거 참가했다.<sup>6)</sup>

5) 每周評論, 1919년 3월 23일자. 왕원주, 「근대 중국인의 한국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5·4운동, 2016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9집, 재인용.

6) 『申報』 1928년 3월 2일, 「상해한국인 어제 독립선언기념대회개최」(『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9, 225쪽 참조.

## 2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 재정립

“카이로선언 속 한국독립 조항 삽입, 그리고 1·2차 반탁투쟁의 승리를 통한 한국의 광복은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의 수립은 3·1만세운동이라는 전 국민적 공분의 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sup>7)</sup>

## □ 필요성

## ○ 해방 이후 정치·이념적 필요에 의해 부정하거나 무시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르게 인식해 헌정질서 회복

- 1987년에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임(예: 건국절 논란)

##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였다. (...) 건국 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다”(2008년 8월15일)

##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2016년 8월 15일)

##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2017년 8월15일)

##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폄하나 배타적인 정통성 논쟁 탈피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은 임시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폄하나 특정 인물 중심의 배타적 정통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자주적 독립, 자유, 평등, 인류애, 평화, 통합을 기치로 분열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임

7) 이태진, 『끝나지 않은 역사』, 태학사, 2017, 220~221쪽.

####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

- 이승만을 띄워 정치적 반사효과를 얻으려는 우익세력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날인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일제강점기 동안 임시정부의 독립투쟁 의미 퇴색)
- 1995년 1월부터 ‘거대한 이승만’ 제하의 <조선일보> 연재기사 65회; “1948년 8월15일은 어디론가 실종돼 버렸다. 자신의 건국기념일을 정부에서조차 제대로 기념하지 않는 나라!”
- 2003년 북핵저지시민연대, 민주참여네띠즌연대, 자유시민연대 등이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국민대회”(건국절 행사) 개최; 이승만 재평가와 건국일 담론 확산
- 2006년 8월 1일자 <동아일보>에 교과서포럼 공동대표(이영훈)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기고

#### [북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폄하]

“(임시정부는) 본질에 있어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일항쟁기세에 편승하여 저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워버려는 투기행위의 산물이었다. (...) 상해 임시정부는 생겨난 첫날부터 부패타락한 부르주아 민족운동 상층분자들의 파벌싸움의 마당이 되었다. (...) 그들은 제국주의 열강에 청원하여 나라의 독립을 선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및 외교활동을 벌여 조선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구미 열강,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호소하여 그의 동정과 도움으로 독립을 선사 받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떠벌리었다.”(조선전사 15권)

#### ○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으로 국민통합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 확립은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국심의 근거로 국민통합과 나아가 남북한의 역사적 통일성을 정립하는 데도 기여할 것임

#### □ 내용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속에서 제시된 ‘독립된 민주공화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렴한 조직체임

-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함을 명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함

#### [법통계승의 의미]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라는 점 및 나아가 현행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3.03.28.선고, 2009두11454 판결)

###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계승하고 있는 국호(國號)와 국체를 제정함

-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일투쟁과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지향하면서 처음으로 정식 국호로 제정함

#### [국호에 관한 임시의정원 논의]

“4월 11일에 國號·官制·國務院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현순(玄楯)의 동의와 조소앙의 재청이 可決되야 토의에 入할새 先히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청하자는 신석우(申錫雨)의 동의와 이영근(李漢根)의 재청이 可決되니라.”(임시의정원기사록)

#### [국호에 관한 제헌의회 논의]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기미년에 2천만 민족의 피로 물들여 명명한 국호”이고, “이 국호로써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한 것인데다, “3·1운동 이후로 30여 년간이나 승계”하여 옴(헌법제정회의록)

- 대한민국 국호는 ‘大韓’의 민족통일적 지향과 함께 ‘민국’의 국체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역사적·정치적 정당성을 지님
- ‘大韓’은 역사적으로 ‘統一三韓’을 뜻하며 현재적 의미에서는 ‘대통합된 한국’을 뜻함. ‘民國’은 ‘국민의 나라’라는 국체를 나타냄

-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갖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단일국가를 이루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임.
- 이러한 대한민국 정통성의 관점에서 李承晩만을 國父로 보는 ‘8월 15일 건국절’論은 잘못된 것임

[48년 8월 15일 건국절’論의 오류]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에 위배
  - 헌법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대한민국은 유럽의 오래된 나라들보다 더 유구한 건국의 역사를 가짐.
  - 단군왕검이 나라를 개창한 10월 3일을 ‘개천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이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부활해 정부를 수립한 날인 8월 15일을 ‘광복절’과 ‘정부수립일’로 기념하고 있음
  - 국가기념일로서는 이것으로 충분함
- 이승만 제한국회 의장의 1948년 5월 31일 개회식사와도 배치됨
  - 정작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가를 ‘건국’한다고 하지 않고 ‘민국의 부활’,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됨”을 거듭 언급함
  -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정의 계승이니 이 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공포
  - “민국 연호는 기미년에 기산할 것”이라고 언급
  -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민회의 의장 이승만”이라고 ‘대한민국’을 연호와 국호로 두 번이나 기입하고 서명
- ‘8·15 건국절’은 ‘광복절’과 의미론적으로 충돌
  - ‘광복(光復)’이란 ‘이전에 존재했던 국가를 되찾는 것’을 뜻함
  -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既존재’를 전제
  - 반면, ‘建國’은 ‘없던 나라를 비로소 창건하는 것’을 뜻함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로서 민주공화제를 수립함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자는 선거권급 피선거권이 유함(1919.04.11)

- 한 국가의 정체는 크게 군주제와 공화제로 나눌 수 있고, 군주제에는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가 있으며, 공화제에는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가 있음
-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매우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것이었음. 중국 측 헌법 문서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25년 “중화민국헌법초안” 이었음.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2월의 체코슬로바키아 헌법과 그해 10월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부터였음<sup>8)</sup>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정한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헌법 제1조로 이어오고 있음

8) 이영록, 2010,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특히 ‘공화’개념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142호, 58쪽.

### (역대헌법 제1조)

역대 헌법문서	반포연월일	제1조 내용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4.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大韓民國 臨時憲法	1919.9.11	제1조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함 제2조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5.4.7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27.3.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0.10.9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944.4.2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민주의원안	194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조선임시약헌	1947.9.2	조선은 민주공화정체임
유진오안	1948.5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권승렬안	1948.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헌법	1948.7.1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내외 각지의 독립운동 세력이 대동단결한 통합정부

- 한민족이 대단결한 3·1 정신의 실현을 위해 내외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상해에 결집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해방된 조국에 귀국할 때까지 27년 동안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해 민족의 자부심과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함
- 좌우이념과 노선을 초월해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과 임시정부들을 통합시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통합정부였음

#### ○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충분한 정통성 확보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법상의 승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지만 일제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주권행사가 막힌 상태에서 망명인사들에 의해 수립된 망명임시정부로서 정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특수한 형태의 망명정부 성격을 지닌 임시정부로서 내정(內政), 교육, 재정, 사법, 군사, 외교 등에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국내 통치권을 장악하기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해 국내 행정망을 구축하는 등 정부로서 실질적인 통치를 했으며 국민들도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립과 자유의 기대를 걸고 지원에 나섬

## [도산 안창호]

“우리 임시정부와 의정원이 이미 성립된 지 3년이란 시간을 지냈고, 대내적으로 말하더라도 압록강, 두만강으로부터 저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가면서 한국사람 보고 묻기를 너의 정부와 의정원이 있느냐 하면, ‘네 우리 정부와 의정원은 상해에 있습니다.’고 대답합니다. 또는 중국령이나 러시아령이나 미국령을 물론하고 해외에 있는 교민이 다 우리의 의정원과 정부가 상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존한 우리의 의정원과 정부를 전체 국민이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는 열국으로 말하여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및 기타 여러 나라들이 아직 우리의 정부와 의정원을 정식으로 승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존한 우리의 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sup>9)</sup>

- 국제적 차원에서도 정부로서 승인을 얻기 위한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함. 한민애국단의 활약,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의거 등 임시정부의 주도적 항일투쟁과 외교활동으로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중국은 1940년을 전후해 한국광복군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함

## [장개석의 일기]

“마침내 한국혁명당원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실로 국민혁명사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뜻을 이루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을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랴! 하루속히 한국의 독립이 완성되기를 바랄 뿐이다.”<sup>10)</sup>

9) 안창호 연설문,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학사, 1994

10) 『蔣介石日記』, 민국34(1945년 11월 4일),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청계, 2017, 628쪽 재인용.

### 「건국의 아버지들론」(Founding fathers of Korea)의 정립과 백범 김구의 위상 재정립

“우리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통치하며 우리 조국을 지배할 지력과 능력을 동등으로 가졌으며 우리는 다른 족속이 우리를 다스리며 혹은 노예로 삼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 또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국제지배도 원치 않는다”<sup>11)</sup>

#### □ 필요성

#### ○ 이승만 국부론의 한계

- 이승만국부론 논쟁처럼 건국을 특정 인물이 주도한 것으로 인식하는 건국영웅론을 탈피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이끈 '건국(建國)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의 위상을 정립해야 함
- 미국의 경우, 독립선언서에 각 지역 대표로 서명했거나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헌법을 마련한 필라델피아 회의 참가자 등 미국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한 많은 사람들을 '건국(建國)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로 모셔 성인처럼 떠받들고 있음
-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도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일 뿐임
- 건국절주장과 이승만국부론은 이승만만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배타적 국부론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독점하려는 시도임
- 독립운동과 정부수립에 이승만의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5년 임시정부의 법률적 탄핵, 1960년 국민의 정치적 탄핵인 하야로 민주주의의 법통 상징 및 국부론에 한계도 분명함

11) 『新韓民報』, 1943년 12월 9일 「카이로 회의 발표에 대한 김구 씨의 성명」, 『한국독립운동사 자료(3)』 「임정편(III)」,

### [이승만 국부론의 문제]

- 초대 대통령임에도 오랜 세월 동안 국부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임정 탄핵(1925), 집권 후 민족정기 훼손, 이념학살, 사법살인, 부정선거 자행에 대한 정치적 탄핵으로서 하야(1960).
- 친일파 대거 등용, 민족정기 훼손(반민특위 해체, 국회프락치사건, 김구 암살)
-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한 학살(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보도연맹)
- 정적에 대한 사법살인 등 민주주의 파탄(진보당, 조봉암 사건, 3.15부정선거)
-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새롭게 확립해 이승만 국부론을 넘어서는 대안적 국부론 제기할 필요가 있음

(제1공화국기 대통령 이승만 관계 기념 조형물<sup>12)</sup>)

종류	제작연도	소재지	기타
이승만대통령 흉상	1954년 9월 18일	서울 교통부 광장	철도창설 55주년 기념
이승만대통령 기념탑	1954년 10월 28일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	전통 탑형태 기념탑
대통령 진영	1955년 3월	서울 경무대	3.26 공개, 서양화
대통령리승만 송수탑	1955년 6월 15일 제막식	경기도 남한산성	조형물
우남회관	1955~1961년	서울 세종로 1가 81번지	1955년 기공 1959년 상량, 1961년 준공
동상	1956년 3월 31일	서울 탑동공원	양복착용
동상	1956년 8월 15일	서울 남산	한복착용
우남학관	1958년 11월 16일	배재학교	신축교사를 우남회관으로 명명
우남 송덕관	1959년 9월 15일 준공	서울 독섬	기념전시관
반신상	1959년 9월 15일	서울 독섬 우남송덕관	한복이 배색 반신상
얼굴 좌측면상	1959년 9월 15일 이전	서울 독섬 우남송덕관	석고부조
우남도서관	1958년	대전 중구 대흥동	콘크리트조에 타일장식
운암정	1959년 11월 18일 낙성식	서울 남산	亭子 건축

12) 표의 출처: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 189. 특히 1956년 3월 1일 삼일절에 맞춰 탑동공원에 이승만 동상을 세워 삼일절 기념식을 그 앞에서 진행함.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에 있고 이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자신임을 표현한 것임.

- 건국절 논란과 이승만 국부론의 기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기력했으며 독립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자학사관과 패배의식이 깔려 있음
  - 한국의 독립운동에 있어 주체적 역량의 폄하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쳐 투쟁하였던 이들의 살신성인의 의미를 더욱 퇴색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자체를 패배주의로 빠뜨리는 것임

[현대사회학회가 제시한 역사 교과서 개정안, 2009]

개정 전	개정안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b>분단</b> 과 6.25 전쟁을 국내외 정세와 관련지어 파악하고, <b>대한민국 정부는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b>	광복과 <b>미소분할 점령</b>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6.25 전쟁을 국내외 정세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b>특히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b>

- 백범 김구의 위상 재정립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평가의 시작이 될 것임
  -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중앙에 앉아있는 김구와 이승만을 포함해 42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상’이 전시되어 있듯이, 한계가 분명한 이승만 일인의 국부론을 넘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Korea)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

〔독립기념관 전시실의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 42인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상

홍 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1942년)	김 인 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1922)
이 시 영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재무부장(1933~1945)	박 잔 익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무부장(1940)
안 창 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총장겸 국무총리대리(1919)	최 재 형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1919)
박 은 식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1925)	김 동 삼	국민대표회의 의장(1923)
이 승 만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대통령(1919)	이 강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1931)
김 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1940)	유 동 렬	대한민국임시정부 참모부장(1939)
신 규 식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1921)	장 봉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1922)
이 동 념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1924)	조 성 환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1940)
김 규 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	김 철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장(1932)
김 좌 진	대한군정서 사령관(1920)	오 동 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1925)
송 병 조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1941)	차 리 석	대한민국임시정부 비서장 (1939)
양 기 탁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1934)	황 학 수	대한민국임시정부 생계부장(1942)
노 백 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1923)	김 성 숙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1944)
이 동 회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1919)	김 원 봉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1944)
조 완 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장(1944)	신 익 희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장(1944)
조 소 양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1945)	유 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1944)
이 상 룡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1925)	김 봉 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1944)
손 정 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1919)	조 경 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1944)
여 운 형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1920)	조 상 섭	대한민국임시정부 학무총장(1924)
윤 기 섭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 차장(1943)	지 청 천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1939)
박 용 만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총장(1919)	장 건 상	대한민국임시정부 학무부장(1943)

## □ 내용

### ○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민주주의자

- 소련식 공산독재 뿐 아니라 여하한 독재와 비민주적 정치도 단호하게 비판

“새로운 국가에도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굶지 않는 자유, 공포를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백범어록, 388쪽)

“어느 개인의 독재도 없고, 어느 한 계급의 독재도 없이 국민이 정치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만민이 정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다.”(백범일지, 426쪽)

### ○ 고난의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속과 통합을 유지해 반일저항의 상징으로 임시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힐 만큼 강한 정치력을 지닌 정치지도자

- 임시정부는 설립 이후 이승만의 대통령 부임 문제로 인한 찬반갈등, 좌파의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이데올로기적 분열 상태에 빠짐
- 이러한 상황에서 한민애국단을 결성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 등 의혈투쟁을 기획·지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단합시키고 그 위상을 높혀 광복정책을 소생 시킴
- 1940년 장개석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광복군을 창설해 항일전투를 벌이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문제에 대한 열강의 국제적 관심 유도

### ○ 카이로선언에서 한국독립의 보장을 이끌어 낸 뛰어난 외교력

[카이로선언 *The Cairo Declaration*] (1943. 12. 1.)

세 강대국은 한국백성의 노예상태를 유념하고 적절한 시점에 한국이 자유로워지고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고 결의決意한다(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 김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의혈투쟁은 임시정부의 위상을 강화시켜 중국정부의 한국독립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명을 이끌어 냄
-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은 장개석 총통과의 직접면담을 통해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설파.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면담 후 일체의 신탁통치안을 버리고 카이로까지 한국의 즉각적 자유독립안을 고수. 이는 ‘적절한 시점(in due course)’에서 한국은 자유독립한다는 카이로 선언의 항목을 이끌어냄
-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식민지국가들 중에서 열강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은 유일한 나라가 됨
- 이승만 또한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 삽입의 공로를 윤봉길·김구·장개석에게 돌림

#### [이승만의 발언]

“윤 의사의 장거(壯舉)가 있는 후로 중국 관민(官民)의 한인을 대하는 태도는 우호와 신뢰로 일변해 한·중 양국은 자고로 순치(唇齒)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으니, 국민정부는 물론이요 장개석 주석부터 김구 선생을 절대로 신뢰해 음으로 양으로 대한임시정부를 성원해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중에도 한국 해방의 단서가 된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 주석이 술선해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창해 연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역시 그 원인이 윤 의사의 장거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도왜실기(屠倭實記)』의 국역판 ‘서문’)

####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결의’ 누가 이끌었나, “김구-장제스 功 확인” 한시준 교수 中사료 발굴]

한시준 교수는 “중국은 소련이 먼저 한국 독립을 승인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 독립에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장제스를 직접 만난 임정 요인들의 외교가 카이로 선언문에 한국 독립 보장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14.03.19)

#### ○ 분단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최초의 남북협상 추진

- 분단이 결국에는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단독정부 구성에 반대해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48년 4월에 성사시킴

- 당시의 냉전구도에서 남북협상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시도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들러리였다는 평가가 있음
-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분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구의 남북협상론은 전쟁의 비극을 거치면서 역사를 통해 그 중요성과 의의가 드러남
- 48년의 남북협상 이후 52년만에야 열린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은 김구가 주장한 남북협상론의 역사적 정당성을 보여 줌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읊고함]**

삼천만 동포 자매형제여, 지금 나의 하나뿐인 염원은 삼천만 동포와 손 잡고 통일정부를 세우는 일에 공동 분투하는 일이다. 조국이 원한다면 당장에라도 이 한 목숨 통일제단에 바치겠노라. 나는 통일정부를 세우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노라(남북회담제안 1948년 2월 10일)

**□ 백범 김구의 묘소 성역화나 서울국립현충원 이장의 필요성**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2017, 광복절 경축사)

-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백범 김구를 비롯해 효창원에 계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필요

**[효창원에 안치된 분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이동녕과 김구, 비서장 차리석, 군무부장 조성환, 이봉창의사, 윤봉길의사, 백정기 의사, 안중근 의사허묘

- 백범 김구를 비롯해 효창원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온 바와 같이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민주주의 이념, 평화통일 이념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세운 인물들임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헌법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국가적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념이 아니라 애국을 국민통합의 가치로 삼아 애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효창원을 국립묘지화하거나 서울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영예를 높이는 것은 애국의 가치를 높이는 것임
- 효창원에 모셔진 김구,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가묘) 등은 이념이나 정파에서 벗어나 애국을 실천한 분들로 국민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임

- 2005년,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바로는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 중 74명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선택
- 2009년, 한국은행에서 고액권 발행계획에 맞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만원, 10만원권 등 고액권 지폐 도안에 포함될 인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조사한 결과, 김구 선생이 36.1%로 2위 신사임당(19.2%)을 큰 차이로 앞서며 압도적인 1위. 3위는 11.3%의 지지를 얻은 유관순 열사가 차지했고, 다산 정약용(4위, 9.7%), 해상왕 장보고(5위, 8.1%)가 뒤를 이었다. 그밖에는 장영실(6.0%), 도산 안창호(5.0%), 주시경(3.7%), 한용운(0.9%) 순

○ 효창원을 성역화하는 방안

- 애국선열들의 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애국선열들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유지하고 애국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효창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는 국립묘지로 승격지정할 필요 있음
- 그러나 효창원을 국립묘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입법노력은 현실적 난관과 갈등으로 번번이 무산됨

- 1984년에 효창원성역화추진위원회, 1987년과 1992년, 대선후보자들의 성역화 약속 지켜지지 않음
- 2006년 국가보훈처가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무산
- 2013년 김광진 민주당 의원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 서울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는 방안

- 김영삼 대통령은 임정 요인들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나 무산(경향신문, 「“臨政요인 묘소 한곳에” 金대통령지시」, 1993년 8월 11일)
- 해방 이후 정부수립에 공헌한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에 기여한 박정희, 민주화를 이룬 김대중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역을 국립현충원에 모실 때 국립현충원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상징하는 곳이 될 수 있음
- 효창원에 계신 일곱 분 모두 건국훈장을 받으셔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충분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 자격을 갖추
- 특히 백범 김구의 경우 그 역사적 위상으로 보아 정부수반급으로 국가적 예우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대의에 합당함

안중근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윤봉길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김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이동녕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이봉창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조성환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차이석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백정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효창원의 성역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묘소를 성역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서울국립현충원으로의 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 국민청원 등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효창원의 성역화 혹은 묘소 이장 공론화 필요



---

#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백범 김구